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 개최

-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 이행 상황 및 우회수단 점검 -

- ◇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에 비해 둔화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일)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1일) 등의 효과 가시화
- ◇ 그간 점검을 생략해온 대출금액 5억원(법인대출),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일정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하여 점검

I. 회의 개요

금융위원회는 '25.7.25일(금) 관계기관 합동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날 회의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한국은행, 금융감독원 등 관계기관과 은행연합회, 2금융권 협회, 주요 은행, 보증기관 등이 참석하였다.

금일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7월 중 가계대출 동향을 점검하고, 지난 6.27일 발표된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의 이행 상황 등을 공유하였다. 또한, 그간의 가계부채 점검회의에서 검토된 대출규제 우회수단 차단방안의 세부적인 이행계획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

- (일시/장소) '25.7.25.(금) 10:00, 정부서울청사
- (참석) 금융위원회,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행정안전부, 국세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 은행연합회, 생명보험협회, 손해보험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신협·농협·새마을금고중앙회, 온라인연계투자금융협회
5대 시중은행(KB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 아이엠뱅크, 케이뱅크
주택금융공사, 주택도시보증공사, 서울보증보험
- (논의) 7월 중 가계부채 동향 및 사업자 대출 등 관리 강화 방안

II. 주요 논의사항

회의 참석자들은 7월 가계대출 증가세가 6월에 비해 둔화되고, 서울 주요 지역의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률도 축소*되는 등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6.27일)과 3단계 스트레스 DSR 시행(7.1일) 등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다만, 향후 주택가격 상승 압력이 다시 확대될 수 있는 만큼, 관계기관들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또한, 금번 대책의 일환으로 7.21일부터 수도권·규제지역내 전세 대출 보증비율이 80%로 강화된 만큼, 전세대출 취급 현황 등에 대한 면밀한 모니터링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 APT매매가격 변동률(%부동산원) : [서울] 6월4주 0.40→7월3주 **0.16** [경기] 6월4주 0.09→7월3주 **0.02**
┆ [강남] 0.73→**0.14** [마포] 0.85→**0.11** [성동] 0.89→**0.37**

또한 참석자들은 시장의 규제 우회 움직임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서는 현장을 가장 잘 아는 금융회사들의 자발적인 관리 강화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는 것에 의견을 모았다. 이에 금융권은 그간 점검을 생략해온 대출금액 5억원(법인대출), 1억원(개인사업자대출) 이하 사업자대출에 대해서도 일정비율 이상의 샘플을 추출하여 점검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6.27일 대책 이후 가계부채 점검회의에 처음 참석한 온라인연계 투자금융협회는 “온투업 대출이 규제우회의 수단으로 악용되지 않게 업권 스스로가 금번 대책 취지에 맞춰 주택담보대출 한도를 관리하고 소비자 오인을 유발하는 과잉·과장광고를 제한하는 등 자율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금번 대책으로 가계대출 증가세가 일부 둔화된 것은 사실이나, 이는 신용대출 등 기타대출 감소세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고 언급하며, “향후 주택시장 과열과 주담대 증가추세가 더욱 안정화될 때까지 금번 대책의 이행 상황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필요시 규제지역 LTV 추가 강화, 거시건전성 규제 등 준비되어 있는 추가조치를 즉시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7.21일부터 시행된 전세대출 보증비율 강화와 관련하여 “최근 전산 사고가 발생한 서울보증을 포함한 모든 보증기관들이 관련 전산 시스템을 철저하게 점검하여 변경된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주문하며, “금융회사들도 보증비율이 낮아진 만큼 전세대출 여신심사를 더욱 강화해 달라”고 강조하였다.

아울러, “금융권에서는 총량목표 감축에 따라 가계대출 관리계획을 다시 수립하는 과정에서 서민·실수요자 등에 대한 자금공급이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해달라”고 당부하며, “정부도 소상공인·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한 금융지원 방안을 마련하여 조속한 시일 내에 발표할 계획”이라고 언급하였다.

담당부서 (총괄)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과	책임자	과 장	권유이 (02-2100-2830)
		담당자	서기관	윤덕기 (02-2100-1690)
			사무관	이은진 (02-2100-1692)
			사무관	이송이 (02-2100-1696)
			사무관	남진호 (02-2100-1691)
기획재정부 자금시장과	책임자	과 장	이희곤 (044-215-2750)	
	담당자	사무관	이은우 (044-215-2752)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책임자	과 장	정수호 (044-201-3337)	
	담당자	사무관	박소영 (044-201-3340)	
행정안전부 지역금융지원과	책임자	과 장	김대영 (044-205-3981)	
	담당자	사무관	조성조 (044-205-3947)	
국세청 부동산납세과	책임자	과 장	김영상 (044-204-3401)	
	담당자	사무관	양창호 (044-204-3417)	
금융감독원 은행감독국 가계신용분석팀	책임자	국 장	김형원 (02-3145-8020)	
	담당자	팀 장	이윤선 (02-3145-8040)	
한국은행 금융안정국 안정총괄팀	책임자	팀 장	김정호 (02-750-6834)	
	담당자	과 장	고은아 (02-750-6619)	